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전라도 광주! 이제는 전라도 없어도 광주광역시라는 이름으로 온 천하가 다 알아주는 도시이다. 백제 때부터 무진주(武珍州)라는 이름으로 불려 오던 고을, 수천 년이 지났으나 영원한 ‘빛의 고을’(광주)로 세상을 비춰 주는 역사의 땅이 되었다. 기록을 살펴보면 광산(光山)이라 했다가 광주라 했다가 셀 수 없이 이름이 바뀌었다. 광주와 광산은 같은 고을로 이름만 바뀌면서 지내왔으나, 1935년에 중심부는 광주부로 나머지 지역은 광산군이라 칭하면서 두 개의 고을로 나뉘고 말았다.

1949년 광주부가 광주시로 승격되고 마침내 1988년 1월 광산군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편입되면서, 같은 이름 두 개의 고을은 끝내 하나의 고을로 합해지게 되었다. 때문에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 보면 광산(光山)이라는 지명이 자

경양(景陽)방죽의 추억

주 등장하는데, 결국 광주와 광산은 하나로 보아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여겨야 한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의 잊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때가 있다. 1950년대 말,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 시절, 계림동에는 경양방죽이라는 큰 저수지가 있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로 꾸며진 곳은 아니었지만, 날씨가 좋은 날 지나다 보면 보트가 매여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보트를 타면서 즐겁게 놀던 모습을 볼 때가 많았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야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절의 경양방죽은 광주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놀이터였다.

우리가 대학생이던 시절까지 경양방죽은 그대로 있었고, 전남대 앞에는 태봉산도 덩실하게 서 있었다. 이런 아름다운 환경들이 개발독재 시대를 만나 하나씩 사라져 갔으니, 광주는 그야말로 삼천백 해가 되고 말았다. 태봉산을 깎아서 경양방죽을 뚫게 때우는 바람에 두 개의 아름다운 풍광이 하루아침에 함께 없어지고 마는 운명을 맞았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15세에 결혼하여 서울에 살던 다산 정약용은 그 다음해인 16세에, 아버지가 전라도 화순현 감으로 부임하자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를 따라와 3년의 세월을 보냈다. 형제이자 지기(知己)였던 둘째 형님 약전 형과는 서로 뜻이 맞아 화순의 뒷산 만연산 아래의 만연사 곁, 동림사(東林寺)에서 독서를 하면서 한창 학문에 힘쓰고, 과거 공부도 열심히 했었다. 1778년 봄, 18세이던 다산은 아버지의 명으로 형님과 함께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올라갔다.

“이런저런 나무들 큰길가에 늘어섰는데(維樹臨官道)/ 역사(驛舍) 가까이에서 저수지 아름답구나(芳池近驛樓)/ 열굴 비취주는 물물은 아득히 멀고(熙春養水遠)/ 저문 구름 한가롭게 두둥실(隨意晚雲浮)/ 대밭 무성해 말 몰기 방해되고(竹密妨行馬)/ 연꽃 활짝 피어 뱃놀이 제격이로세(荷開合汎舟)/ 장엄하도다 저수지의 관계(漣漣) 공력(泓裁漣漣力)/ 일천 이랑 논들에 물이 넘치네(千畝得油油)“ 다산이 쓴 ‘과경양지(過景陽地)’라는 제목의 시다. “기해년(1778), 그때 둘째 형님과 함께 서울로 갔는데 2월이었다. (己亥 時興仲氏同赴漢陽 二月也)”라는 부침 글을 보면 화순에서 서울로 가다다 광주주의 경양방죽을 지나가면서 읊었던 시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242년 전의 다산 시에서 우리는 광주의 옛 풍광을 넉넉하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지금이야 경양방죽의

옛 자리에는 구시청이 있었고, 그곳은 태봉산을 깎아 온 흙으로 메꾸었으며, 또 시청은 지금의 상무지구로 옮겨가 버렸으니, 생각하면 아까운 거대 저수지 하나만 사라지고 만 셈이다. 또 그곳에는 경양역(景陽驛)이라는 역사가 있었기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던 곳이었고, 전남 일대에서 서울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목로 주점이 즐비하던 곳이었다.

대밭이 우거져 말 타고 가는 행인에게 방해가 되고 연꽃이 피어 뱃놀이하기에 좋은 곳이었으니, 그 경치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을 것인가. 더더욱 놀라운 일은 그곳 저수지의 저수량이 너무 풍족해 광산군 일대의 논에 물을 넉넉하게 관개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그 저수지가 그대로 있다면 어떤 풍경일까를 상상해 보면 개발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금방 알게 해 준다. 안목 짧은 도시개발, 자연을 파괴하고 역사를 묻어 버리는 죄악, 오늘 누가 계림동 옛날 시청 자리에 경양역과 광주의 수자원인 경양방죽이 있었음을 알기라도 할 것인가. 나는 다산의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미래를 보는 행정가들의 비극을 떠올리곤 한다.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 우거진 숲의 태봉산, 넘실대는 경양방죽!

기고

코로나19에도 민주주의 꽃향기 가득했으면



박정일  
국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들과 산에 온갖 꽃과 새들이 눈에 들어온다. 매화, 산수유 등 꽃잎이 자라다툼 하듯 활짝 피어 오르고 있다. 여느 해처럼 나들이로 활동할 시간과 공간들이 길고 넓게 보여져야 할 시기인데, 코로나19가 나라 안팎에 퍼지면서 우리 모두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는 다가왔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채 20여 일도 남지 않았다. 모든 게 멈춰 버린 듯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저만큼 밖으로 밀려나 있는지 모르겠다. 대면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도 거의 없다 보니 우리 지역

구엔 누가 선관으로 뛰는지, 누가 다녀갔는지 알 수 없어 더욱 그렇다.

최근 공식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자별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선거 운동(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 우편, 전화 이용)과 언론 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대담 토론회, 각 정당의 정당·정책 방송 연설, 정당·정책 신문 광고 등 매체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활발해 질 것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뉴플랫폼을 활용한 홍보전에도 열을 올릴 것이다. 이에 유권자로서 후보자 면담과 각 정당의 정당 정책을 유심히 그리고 냉정하게 살펴볼 일이다.

이번 기회에 만 18세 신규 유권자는 한국선거방송 등을 통해 어떻게 선거가 치러지는지,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다양한 선거 운동 방법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시청하며 각종 선거 관련 정보도 함께 체득해 보길 바란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인물로 제공하는 각종 홍보 자료에도 관심을 가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넘쳐나는 정보 중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이 어려운 시대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휘발성 있는 사건이 벌어지면 하루에만도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진다. 그 가운데 사실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가 뉴스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유포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두렵다.

가짜 뉴스를 다른 책을 쓴 모 저자는 신문과 TV가 가짜 뉴스 발원지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같은 뉴플랫폼을 지목한다고 한다. 전문성이 결여된 데다 정파적 관점과 자극적 소재만을 다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들이 만든 정파적 콘텐츠는 기존 언론의 보도를 토대로 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팩트가 아닌 가짜로 여론이 흔들리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가정이다. 유권자의 냉정한 팩트 체크와 정보에 대한 비판적 수용 의식이 절실하다. 우리 위원회의 선거 절차 사무에 대한 허위 정보와 의혹을 근거 없이 제기하고 이를 생산하여 유튜

브에 올려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이도 있었으니 말이다.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올해 4·19 기념일은 60주년이 된다. 1960년에 발생한 이후 국회의원 선거를 16번에 걸쳐 치렀다. 불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외친 이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가야 할 민주주의의 길을 만들었다. 그 뜻을 앞으로도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많은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사회 갈등 극복과 사회 통합을 기대하고 있다.

4월 15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 관리 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로, 유권자는 선거 참여와 올바른 투표로, 정당과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견과 정책으로 준비 선거 운동을 다짐하며, 냉정하고 차분하게 잘 치러 내자.

코로나19 사태로 참으로 힘든 일상이 오래가지 않게, 하루빨리 극복하도록 우리 모두가 동참해 반드시 이겨 내자고 다짐해 본다. 오랜 기다림에 끝맺음도 없으려니 못자리에 모를 키우듯 정성을 쏟으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도 아름다운 꽃향기를 터뜨릴 것이다.

기고

전국 동시 자가 격리 절실하다



정진욱  
희망과살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은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2주간 자발적 자가 격리’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진즉 했어야 했다. 경제에 타격이러지만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보다 강력한 대처가 더 낫다.

중국의 경험을 봐도 그렇다. 코로나19의 시작이 중국어어선지 중국의 경험은 경시돼 왔다. 우한에 남은 600만 명과 춘절을 맞아 우한을 벗어난 500만 명으로 인해 중국 전역이 코로나19의 배양실처럼 됐을 때, 중국은 극한의 봉쇄와 자가 격리를 실행했다.

필자는 중국 상황을 당시부터 실시간으로 취재한 바 있다. 우한 봉쇄와 단체 식사 금지들 시작으로, 사람이 보이고 접촉하는 모든 것을 금지했다. 아파트 단지는 2-3일에 가구당 1인이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출입증을 발급했다. 배달원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멈췄다. 발열 체크에 예외가 없었다. 큰 도시는 구 단위로

봉쇄했다. 마스크와 방호복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폭스콘, 비아더, 상하이자동차그룹, 테디바오베이(기저귀 생산업체) 등 주요 기업들이 업종과 상관없이 마스크와 방호복 생산 라인을 설치했다. 그렇게 한 달 이상을 싸우자 확산이 확연히 꺾였고, 직장의 위험도를 저·중·고로 분류해서 단계적으로 문을 열었다. 그런 고통스런 사투의 결과가 지금이다. 그러고도 언제 다시 창궐할지 몰라 숨을 죽이고 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이다.

중국의 봉쇄 정책은 정부가 모든 것을 쉽게 강제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구조 덕분이다.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주목할 것은 중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 규칙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 규칙들은 권고 사항이 아니라 강제와 처벌이 있는 강행 규정이다.

민주 국가는 중국 방식이 불가능한가. 현재 독일이 중국 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전면 봉쇄만 아닐 뿐이다. 독일은 현재 사태를 2차 대전보다 더 큰 위기로 규정한 메르켈 총리의 담화문과 함께 세계 최고 명확한 행동 규칙을 발표했다. 엄격한 강행 규정이다. 모든 종교에 대해 현장 예배를 금지했다.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집단 감염을 막으려면 다른 선택이 없었다.

반면 우리에게 두 달이 되도록 ‘강제

적’ 행동 규범이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란 모호한 권고 사항이 있을 뿐이다. 메르켈 총리는 담화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란 말을 한번도 쓰지 않았고 “물리적 거리를 지키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야 하고, 서로 돕고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져야 한다.

그런데 신천지로 인한 폭발적 확산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현장 예배 금지, 클럽 금지 같은 ‘물리적 거리 두기’와 관련한 ‘강제력 있는’ 행동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지 처분에 따른 보상, 개인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라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만 놓을 때가 아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 하면서, 정부가 모든 어려움을 맡기는 것은 안된다.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주 동안 꼭 필요한 공무, 기업, 단체의 활동 말고는 모든 모임과 개인 활동을 중지하자”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 중국도 정부만 나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이겨내자”고 합심 협력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다.

우리에 이어 미국과 전 유럽에서 코로

나19가 창궐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를 막는 일도 커졌다. ‘전 세계적 일 방역 및 지원 네트워크’가 있지 않고서는 지구촌 전체의 재난을 이겨내기 힘들다. 한국과 중국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긴급한 국가에 대한 의료 용품 지원 등 전 세계적 협력과 지원을 조정하는 국가간 협력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한다. WHO는 역부족이다. G20이 주도하고 UN이 협력해야 한다. 적절한 사전 준비를 거쳐 세계적 차원에서 동시에 2주 동안을 이동 제한과 자가 격리를 실행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제안해도 좋을 것이다. 그 기간 중에도 기업과 수출입 활동, 긴급 귀국과 의료 관련 인력, 기업인, 기술자, 과학자의 이동은 더욱 보장해야 한다.

이런이 있지만 최저 기온 10도 이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활동은 약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기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택해 전 세계적 공동 행동이 이뤄진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더욱 과감하게 구체적인 행동 규정을 제시하고 국민들은 그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실마리가 열릴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지혜와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社說

짜인 총선 대진표 이젠 유권자 심판만 남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4·15 총선에 나서는 광주·전남 후보자들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광주는 8개 선거구에 42명이 등록해 5.25대 1,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45명이 등록해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 지역구 평균 경쟁률은 4.4대 1을 기록했다. 한데 뇌물수수, 폭력, 사기, 상습적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시민의 상심에 응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한 군 소정당 후보자는 살인 전과까지 있었다. 후보들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경력 등 신상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광주·전남 지역 후보자들도 하자가 많았다. 남성 후보 79명 중 19명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일 현재 세금을 체납 중인 후보자는 세명, 최근 5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이력이 있는 후보자는 열네 명으로 집계됐다. 우려스러운 것은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가 열 명 중 네 명이 넘는다는 점이다. 87명의 후보 중 전과 보유자는 38명으로 43.7%에 달했다. 물론 이중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후보들도 있긴 하다.

하지만 청소년 강간과 집단 흉기 상해 같은 흉악 범죄나 상습 음주 운전, 공직 선거법 위반 등 시민의 상심에 위배되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들이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입후보한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이들 후보를 내세운 정당들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처럼 정당이 국민을 대표하기는커녕 아예 시민사회에서 격리를 해도 모자랄 후보들을 내세운 것은 부실 검증과 구태 공천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유권자들이 부적격 후보의 국회 진출을 막아야 한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각 정당과 후보들이 대면 선거 운동을 자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다음달 2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에 공개되어 있는 후보자 정보 열 명 중 네 명이 넘는다는 점이다. 87명의 후보 중 전과 보유자는 38명으로 43.7%에 달했다. 물론 이중에는 민주화

코로나로 일감 끊긴 장애인 어려움 없도록

코로나로 일감이 끊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광주·전남 지역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장애인들의 활동 공간인 ‘직업재활시설’도 개점휴업 상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출 직전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인데 우선 재활 시설 상당수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주문받은 일감이 폭 줄고 상황이다. 여기에 감염 확산을 우려해 문 닫는 날이 잦아지면서 수입이 끊긴 장애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전남 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9곳(광주 27곳·전남 22곳) 중, 27곳(광주 11곳, 전남 16

곳)이 코로나19 때문에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이다. 광주·전남 49개 장애인 직업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인만 1262명.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0명이 이달 초부터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나마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급여의 70%를 보장받는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훈련생 신분으로 일하는 장애인들은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어 끼니마저 걱정이야 할 처지다. 따라서 사실상 무급 휴직 상태에 있는 훈련장애인들을 위한 우선적 지원이 절실하다.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이들 장애인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함으로써 나와 이웃 간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독일의 신학교수이자 사제였던 마틴 루터(1483-1546)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역사적인 인물이다. 당시 그는 면죄부를 고안한 알브레히트 대주교에 맞서 95개 조항의 프로테스

신앙의 본질

탄트를 주장했다. 루터의 개혁 사상과 더불어 오늘날에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혹사병에 관한 입장’이다. 루터의 혹사병에 대하는 자세는 지극히 이타적이다. 그는 교회가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는 억압, 무지, 미신이 횡행하던 암흑의 시대였다. 전염병이 발병하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당에 집결했고 그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되기도 했다.

코로나 집단 감염 우려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이지만 작금의 교회들이 공예배(현장 예배)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자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사행되는 공간이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집회만을 고집하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라’는 자구(字句)에만 매몰된 율법주의 신앙이 아닐까 싶다.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어야 종교의 자유도 주어진다든 평범한 진리를 간파한 것이다.

성경에는 안식일에 배가 고프다 밭 일삭을 훑어 먹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 안 된다’는 계명을 어겼다고 비난을 한다. 이에 예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외형적인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실천이 아닐까. 코로나 사태는 신앙의 형태 나아가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준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